

김은경 혁신위, 쇠신안 호응 없고 설화만

“예상치 못한 전개로 흘러... 스텝 꼬일대로 꼬여”

이번엔 '노인 비하 논란'... 잇단 설화에 당내에서도 '황당' 혁신안 논의는 계파 갈등에 '후순위' ... 지도부는 '침묵'

더불어민주당 김은경 혁신위원회가 이번엔 노인 비하 논란에 휘말렸다.
그간 이렇다 할 쇠신 성과를 내지 못한 가운데 김 위원장은 연일 발언으로 구설수에 오르면서 당내 입지가 위축되고 있다.
출발 한달여 만에 좌초 위기에 직면한 것 아니냐는 우려 섞인 전망까지 나온다.
1일 비명(비이재명)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당내선 김 위원장을 향한 질타가 쏟아졌다. 김 위원장은 최근 청년 좌담회에서 노인 유권자들을 미래가 밝은 분'에 비유해 여론의 못매를 맞고 있다.
조용천 의원은 이날 라디오 '정영신의 아침저녁'에서 "정말 귀를 의심했다"며 "과연 우리 당을 혁신하려, 도와주러 오신 분이 맞나"라고 직격했고, 이상민 의원도 또 다른 라디오 인터뷰에서 "너무 황당하다"며 거들었다. 이 의원은 혁신위가 발언 취지를 해명할 때 대해서도 "논란 발미를 만들지 말아야 했다"고 꼬집었다.
김 위원장이 설화로 구설수에 휘말린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당내 초선들을 학력이 저하된 '코로나 세대' 대학생에 비유했다가 사과했고, 이낙연 전 대표를 향해선 '계파를 살려 정치하려 한다'는 취지로 발언했다가 친이낙연계 의원들로부터 반발을 사기도 했다. 당내선 김 위원장의 연이은 설화 리스크에 황당하다는 반응이 나온다.
신동근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김 위원장 취임 이후 설화가 잦다"며 "진아가 어떻든 간에 그런 논란이 잦다는 것은 분명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당 혁신에 매진하기도 박찬테 위원장의 설화 리스크에 마음이 조마조마하게 된다"며 "이런 정상이 아니다"라며 "김 위원장의 말이 더 진중해져야 한다"고 적었다.
또 다른 비명계 초선 의원도 뉴시스와 만난 자리에서 "말에 무게감이 있어야 하는데 혁신위원장 임이 너무 가볍다"고 일침을 가했다.
친명계에서도 우려가 나오기 시작한 것이다. 친명계로 분류되는 한 초선 의원은 뉴시스와 한 통화에서 "그분(김 위원장)이 왜 자꾸 그러시는지 모르겠다. 처음 한두 번은 정치를 안 해본 분이어서 실수로 여겼는데,



더불어민주당 김은경 혁신위원회가 이번엔 노인 비하 논란에 휘말렸다. 그간 이렇다 할 쇠신 성과를 내지 못한 가운데 김 위원장은 연일 발언으로 구설수에 오르면서 당내 입지가 위축되고 있다. 사진은 김은경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장이 지난달 30일 서울 성동구 성수동의 한 카페에서 열린 2030 청년좌담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 같은 상황이 반복되면 단순히 실수로 볼 문제는 아니지 않나"라고 쓴소리를 했다.
잡음이 이어지는 가운데 혁신위 본연의 과제는 뒷전으로 밀려나 모습이다. 기득이나 계파 갈등을 비롯한

복합적인 이유로 혁신위 활동이 속도를 내지 못하는 상황이다.
혁신위는 진통 끝에 1호 쇠신안인 '불체포특권 포기'에 대한 의원총회 추진을 끌어냈지만 이후 담보 상태에 빠져 있다. 지난달 21일 2호 쇠신

안 일환으로 '기명투표 전환'을 요구했지만 열흘이 지나도록 이는 당내 논의 테이블조차 오르지 못하고 있다. 비명계 반발이 거센 탓에 당 지도부도 공론화를 주저하는 분위기다. 자칫 당내 분란만 키울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이후 혁신위가 공천 물까지 손 보기 시작하면 계파 갈등은 악화일로를 걸을 것으로 우려된다.
한 혁신위 관계자는 "전반적인 상황이 예상치 못한 전개로 흐르고 있어 당황스럽다"며 "스텝이 꼬여도 너무 꼬였다"고 말했다.
혁신위는 일단 노인 비하성 발언 논란과 관련해서 "김 위원장 아들(김준우)의 중학생 시절 아이디어로 청년 정치 참여를 독려했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혁신위 해명 이후에도 당 안팎의 비판이 쏟아지는 데 대해서도 "정치 공세로 규정하고 추가 대응을 자제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다른 혁신위 관계자는 "김 위원장 발언 전문을 살펴보면 노인 비하 의도가 전혀 없다는 맥락이 읽힐 것"이라며 "정치 공세엔 굳이 대응할 필요 없다고 본다. 대응할수록 상황만 안 좋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혁신위는 이날 오전 재선 의원들과 조찬 겸 비공개 회동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도 이번 논란과 관련한 논의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뉴시스

정읍시의회 시민경제플러스 연구회, 서울시 정수센터 방문

정읍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시민경제플러스 연구회(대표 한선미 의원)는 최근 소속 의원 6명이 서울시 성동구에 위치한 서울특별시 상수도본부 쪽도 이리수 정수 센터 등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쪽도 이리수 정수 센터에서 정수시설과 홍보관으로 이동한 뒤, 영상을 보면서 '취수-도수-약품 투입-응집-침전-여과-소독-저장-송수' 등의 과정을 거쳐 이리수의 맑은 물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확인하고, 정수 센터 운영현황 등을 살펴보았다.
이어서 의원들은 수도박물관을 방문해 서울시 상수도의 역사와 기술 발전 과정 등을 확인했다.
시민경제플러스 연구회는 한선미 의원을 대표 의원으로 황해숙, 이복형, 이만재, 오승현, 고성환 의원으로 구성되었으며, 시민경제 활성화 및 도농복합지역 농촌 경쟁력 제고 방안을 위한 정책 개발, 입법 활동 등을 펼칠 계획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6·1 지방선거 기부행위 과태료 총 1950여만원 부과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해 6월 1일 실시된 제2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 정당관계자들로부터 식사를 제공받은 선거구인 42명에게 총 1,950여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전북선관위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5월 지방선거 선거운동기간 중 후보자 및 당원등 선거구인 120여명이 모인 단합대회에 참가해 총 300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받아, 1인당 48만원 정도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부과결정된 과태료 금액은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기간을 거쳐 최종 확정되거나 의견제출기간 중 자진납부시 20% 감경받을 수 있다.
/김재훈 기자

전북특별법 개정안 부처 설득 총력전

도, 정운천·윤준병 의원과 제도개선 세미나 추진

전북도가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 연내 통과를 목표로 전북지역 국회의원과 힘을 합쳐 부처설득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전북도에 따르면 1일 국회에서 정운천 국회의원(비례대표, 국민의힘), 윤준병 국회의원(정읍·고창,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고용부·법무부·국방부·중기부·교육부·농림부·해수부 관계자와 김종훈 경제부지사가 참석한 전북특별법 개정안을 위한 세미나를 가졌다고 밝혔다.
먼저 정운천 의원 세미나에는 김종훈 전북도 경제부지사가 참석해 '글로벌 생명경제 도시, 전북특별자치도의 발전 방향에 대해 토론하고, 지방 소멸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

는 이민·외국인 특례, 민생경제 활력을 위한 지역상권 지원특례, 국제학교 설립 등을 위한 교육특례 등에 대해 각 부처의 전향적인 검토를 요청했다.
특히, 도에서 강력한 추진 의지를 밝히고 있는 이민자 확대를 위한 특례에 대해서는 지역 특색에 맞는 외국인 유입 및 정착을 위하여 중앙의 관련 이양이 필요하다는 것을 적극 피력하였다.
세만금 내 케이팝 국제교육도시 육성을 위한 국제학교 설립방안, 문화예술 전문교육을 수행할 수 있는 정책 지원 등 교육분야 제도개선에 대하여 교육부와 구체적인 해결방안도 논의했다.
또한, 같은날 국회에서 열린 윤준병 의원 세미나에서는 도 관계자들이 참

석하여 농림부·해수부 관계자와 함께 한우산업 보호·육성 및 해양수산 분야에 대해 특례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긍정적 검토를 요청했다.
이어 2일에도 과기부·국토부 관계자가 참석하는 윤준병 의원 세미나에도 관계자가 참석해 연구개발특구 및 수요 응답형 교통체계 운영 등에 대하여 특례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전북도는 지역 국회의원과 협력해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 통과를 위한 부처 릴레이 세미나를 지난 6월 말부터 지속 추진하고 있으며, 김종훈 전북도 경제부지사는 "전북도만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전북특별자치도를 추진하고자 한다"면서, "전북의 새로운 도전과 과감한 추진을 위해 부처에서 적극 지원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건축물에 달린 대지의 조경, 본격 관리 나서나

이명연 도의원, '전북도 대지의 조경 관리 조례' 대표발의 탄소중립 실현 최초의 자치행정 구현 사례... 이행 여부 주목

건축법상 대지의 조경이란 건축주가 200㎡ 이상의 대지에 건축물을 신축할 때 시군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대지면적의 5~18% 면적에 조경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현재 대부분의 대지의 조경이 건축허가를 위해 조성하다가 관리되지 않고 방치하거나 주차장, 창고, 실외기 거치 등으로 훼손되고 불법점용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
전북도의회 이명연 의원(전주10)은 "대지의 조경 제도는 1977년부터 건축법 제42조에 따라 시행돼 40여년이 넘는 시간동안 제대로 된 실태조사나 불법점용 등에 대한 점검,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실적이 전무한 상태다. 건축주는 물론 행정에서조차 적극적인 관리감독을 하지 않아 도시 속 조경면적 확보 및 환경훼손 방지라는 법취지를 전혀 실현하지 못하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이 의원은 지난 5월 5분발언에 이어 7월 제402회 임시회에서 전라북



도 대지의 조경 관리에 관한 조례를 대표로 발의해 건축물에 달린 작은 조경이지만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도심 속 녹지공간으로 탄소저감 및 미적쾌감 향상 도시이미지 개선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조례에는 2년마다 대지의 조경 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는데, 관리계획에는 시군별 대지의 조경 설치 현황 및 유지관리 실태조사, 관련법 제도 운용현황, 유지관리 지원사업 추진현황 및 계획을 담는다 또한 유지관리의 기본원칙을 정해 도시사 및 시장·군수로 하여금 대지의 조경이 법적 기준에 맞게 잘 설치되고 유지관리되고 있는지 점검하도록 하였으며 대지의 조경 설치 및 유지관리 가이드라인 제작, 조경관리사 지원, 식재 식물 및 조

경시설물 지원 관련 행사, 캠페인 등 홍보활동, 관련 시민단체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특히 대지의 조경이 사유재산인 만큼 조례에는 건축주인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독려했을 수 있도록 건축조경 지침이제도, 우수 대지의 조경 인증제도, 포상제도를 운영할 수 있게 했다.
이 의원은 "지난 5월에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도내 대지의 조경면적이 최소 30만 평 이상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전주 월드컵경기장 잔디구장 124개에 해당하는 면적이다. 이번 조례를 계기로 전북도 차원에서 시군과의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대지의 조경이 더 이상 방치되는 일 없이 도시 녹지공간으로 미세먼지 정화, 미적 쾌적성 증진 등 제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대지의 조경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한 본 조례는 전국 최초로 제정된 것으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최초의 자치행정 구현 사례로 전북도의 조례 이행 여부가 주목된다.
/김재훈 기자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개인방역수칙 생활화, 감염병 예방의 지름길

Advertisement for '2023 Summer Music camp Concert Forum' held from August 1st to 6th. The event is organized by '문화공간 이룸 ART SPACE' and is aimed at youth. It features a music camp and a concert forum. The background of the ad shows a stylized graphic of a musical instrument.